

Part 5 — Q&A

귀여운 판다 님의 질문 — AI가 미국 부채를 압도할 수 있을까

· 정리 2026-09-08

AI가 부채를 풀어줄까

"AI가 진짜다"와 "부채가 풀린다"는 다른 문장이다.

이자는 계약서에, 생산성은 논문에 적혀 있다.

박종훈의 지식한방 Q&A — Part 5-1강 후속.

\$2.1조

미국 연방정부 순이자 지출, 2026년 \$1.0조 → 2036년 CBO 전망

AI 혁명이 미국의 부채 문제를 정말 풀어줄 수 있을까?

1. 확산은 역대 최고, 통계는 조용하다

생성형 AI는 2년 만에 39%가 보급됐다 — PC(3년/20%)·인터넷(2년/20%)보다 압도적으로 빠르다. 2025년 12월 기준 미국 근로자 35.9%가 이미 생성형 AI를 쓰고 있다(Hartley et al. 2026; 세인트루이스 연준·NBER).

그런데 국가 전체 생산성 통계는 조용하다. TFP(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024년 1.5%에서 2025년 0.8%로 오히려 반토막. IT 혁명 때도 거의 10년간 생산성에 큰 도움이 안 됐다는 로버트 고든 교수의 연구와 같은 패턴이다.

TFP(총요소생산성) 증가율

2024년		1.5%
2025년		0.8%

보급 속도는 역대 최고, 생산성 통계는 오히려 둔화

2. 전문가 추정치 20배 차이

AI가 앞으로 생산성을 얼마나 끌어올릴지, 전문가 의견은 극단적으로 갈린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아세모글루는 TFP가 연 0.07%p만 오를 것으로 본다 — 사실상 효과가 거의 없다는 뜻이다.

아기웅·뷔넬은 0.68~1.3%p로 훨씬 높게 본다. 가장 낙관적인 골드만삭스는 1.5%p. 신중 진영(샌프란시스코 연준 등 경제학자 약 3분의 2)은 '아직 거시 증거 없음'이라는 입장이다.

낙관 진영(브린올프슨·퍼먼)은 '이미 집계치에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고 반박한다. 두 진영 모두 매 분기 보고서를 내며 서로의 근거를 검증하는 중이라, 통일된 수치는 아직 없다는 게 강사의 정리다. 노벨상 수상자조차 이렇게 극단적으로 낮게 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이 논쟁이 얼마나 초기 단계인지를 보여준다.

■ AI 연간 생산성(TFP) 추가 효과 추정치

골드만삭스 (가장 낙관)		1.5%p
아기웅·뷔넬		0.68~1.3%p
아세모글루 (노벨상)		0.07%p

같은 질문에 20배 차이나는 전문가 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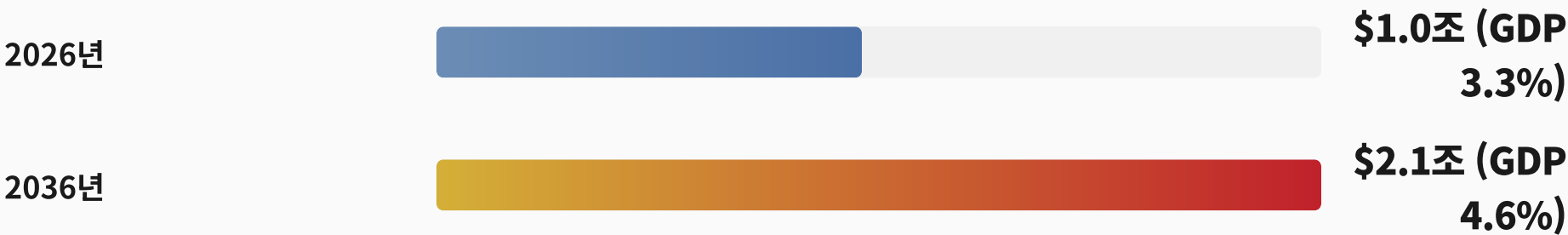
3. 이자 시계는 안 멈춘다

생산성 논쟁이 어떻게 결론 나든, 이자 부담은 수학적으로 계속 불어난다. 2026년 미국 연방정부 순이자 지출은 1조 달러 — 미국 한 해 세수(5조 달러)의 5분의 2에 이른다.

CBO(미국 의회예산처) 공식 전망으로 2036년에는 2.1조 달러가 된다. '이자'는 계약서에 확정·자동·복리로 적혀 있고, 생산성은 아직 논문 수준의 가설·조건부다'가 강사의 요약이다.

생산성 논쟁이 어느 쪽으로 결론 나든 이 숫자는 그대로 늘어난다는 게 핵심이다. 이자 지출은 국채 계약서에 확정된 금리로 자동 계산되지만, AI가 생산성을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아직 어느 학자의 주장도 확정되지 않았다. 확정된 숫자와 가설적 숫자를 같은 무게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게 이 카드가 전하는 메시지다.

■ 미국 연방정부 순이자 지출



10년 만에 2.1배

†3 CBO 2026~2036 예산 전망 [cbo.gov](https://www.cbo.gov)

4. 2031년, 이자가 성장을 추월한다

CBO·CRFB 전망에 따르면 2031년부터는 부채의 평균 이자율이 성장률을 추월하는 구간에 들어간다 — 빚이 스스로 몸집을 불리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이자가 소득보다 빠르게 불기 시작하면, 갚기 위해 다시 빌리는 구조가 자동으로 굴러간다.

미국의 합계출산율도 1.6까지 떨어져 있어, 성장률 전망 자체가 낮아지는 흐름과 겹친다. 정부가 빌리는 돈이 늘어날수록 평균 이자율도 함께 오르는 구조라, 이 흐름은 2031년부터 되돌리기 어렵다는 게 CBO의 진단이다. 성장은 느려지는데 이자만 빨라지는, 방향이 어긋난 두 곡선이 만나는 지점인 셈이다.

강사는 이걸 '정부가 배추 20포기를 사다가 지금은 40포기를 사는 것'에 비유한다. 사는 양이 늘어날수록 값이 더 비싸지듯, 정부가 빌리는 돈이 늘어날수록 평균 이자율도 함께 올라간다는 뜻이다. 이 악순환은 AI 혁명의 성패와 무관하게 이미 진행 중이다.

2031년이 되어 갑자기 상황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계속 조금씩 나빠지는 흐름의 한 지점일 뿐이라는 점도 강조된다. 그래서 미국의 재정은 성장률이 웬만큼 회복되는 정도로는 되돌리기 어려운 궤도에 들어서 있다는 게 강사의 결론이다.

출산율 하락이 왜 성장률을 끌어내리는지도 함께 짚는다. 합계출산율이 떨어지면 소비할 사람도, 저축할 사람도, 세금 낼 사람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성장률이 낮아지는데, 이 패턴은 전 세계 어디에도 예외가 없었다는 것이다. AI가 생산을 대신할 수는 있어도 사람을 대신해 소비하거나 저축하거나 세금을 내주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는 게 강사의 설명이다.

5. 가장 후한 가정을 넣어도 결론은 같다

TFP가 매년 0.5%p씩, 단 한 해도 쉬지 않고 30년간 오른다고 가정해보자. 이건 인류 역사에서 딱 한 번, 1995~2004년 닷컴 호황기 9년 동안만 있었던 기록을 그 3배 넘는 기간 유지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런 기적적 시나리오를 넣어도, 현재 GDP 대비 100%인 미국 국가부채는 현행 정책대로면 30년 뒤 199%가 된다. 닷컴 호황급 생산성 혁명이 30년 이어져도 158%로만 낮아지고, 금리 상승 효과까지 반영하면 오히려 233%까지 늘어난다.

가장 잘 됐을 때조차 부채 문제가 이 정도라는 게 핵심이다. 만약 이 정도 생산성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현행 정책 기준선 199%에 금리 부담까지 더해져 30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게 강사의 부연이다.

■ 30년 뒤 미국 GDP 대비 국가부채 (현재 100%)

시나리오	GDP 대비 부채
현행 정책 기준선	199%
닷컴호황급 30년 지속 (+0.5%p)	158%
+ 금리 상승 효과 반영	233%

6. 2026년 2월 20일, 실제로 일어난 일

이자 시계가 얼마나 냉정한지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있다. 2026년 2월 20일, 연방대법원이 6:3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로는 부과할 수 없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때까지 걷어들인 관세 수입이 한순간에 되돌려줘야 할 빚으로 성격이 바뀌어 버린 것이다.

그 결과 정부는 최대 1,750억 달러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다만 판결이 곧바로 환급을 명령한 것은 아니어서, 실제 정산에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왔다). **'세입은 법원이 지워도, 이자는 누구도 못 지운다'** — 세금은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줄어들 수 있지만, 갑자기 더 걷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게 이 사건이 보여주는 비대칭이다.

강사는 이 사건을 이자 시계의 비대칭을 보여주는 구체적 증거로 든다. 국채 이자는 법원 판결로도, 정치적 결정으로도 지워지지 않고 매초 확정된 속도로 쌓이는 반면, 세입은 관세 위헌 판결 같은 예상 밖의 사건 하나로도 쉽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세금이 갑자기 덜 걷히거나 돌려줘야 하는 일은 일어날 수 있지만, 뜻하지 않게 세금이 더 걷히는 행운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강사의 진단이다.

포퓰리즘 성향의 정치도 이 비대칭을 키운다. 진보 쪽은 돈을 나눠주는 정책을, 보수 쪽은 감세 정책을 택하는 경향이 있어, 정권이 어느 쪽으로 바뀌든 세입이 줄거나 지출이 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쉽다는 게 강사가 덧붙인 관찰이다. 한쪽은 돈을 쓰고 한쪽은 세금을 안 걷는 구조가 번갈아 반복되면서 부채는 계속 쌓이고, 그만큼 이자 부담도 함께 커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7. 유일한 성공 사례는 '성장 혼자'가 아니었다

미국이 1980년부터 지금까지 유일하게 재정 흑자를 낸 4년은 1990년대 후반 닷컴 호황기다. 그런데 그 흑자는 성장(인터넷 혁명) 하나가 아니라 정치(증세 + 소련 붕괴 후 국방비 감축)와 인구(베이비부머의 납세 전성기)까지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2026년의 조건은 정반대다. 정치는 감세 기조(+4.7조 달러 규모)이고, 인구는 베이비부머가 은퇴해 연금을 받는 쪽으로 넘어갔다. 성장(AI)만 검증 중인 상태에서 정치와 인구 두 박자가 1990년대와 반대로 돌고 있다.

그 흑자마저도 오래가지 못했다는 점도 함께 짚는다. 닷컴 버블이 꺼지자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대거 풀면서 4년 만에 흑자가 사라졌고, 이후 불황이 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돈을 풀며 지금의 거대한 부채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1990년대 흑자 삼박자 vs 2026년

요소	1990년대	2026년
성장	인터넷 혁명	AI (검증 중)
정치	증세 + 국방비 감축	감세 +\$4.7조
인구	베이비부머 납세 전성기	베이비부머 은퇴·수급

8. AI가 성공해도 남는 딜레마

AI 혁명이 크게 성공해도 부채 관점에서는 딜레마가 남는다. 인플레이형은 전력·구리·데이터센터 등 실물 투자가 커서 물가·금리가 오르는 경로다(1990년대 IT 혁명이 자본을 가볍게 썼던 것과 대조적).

디플레이형은 생산성이 정말 크게 올라 물가가 내려가는 경로인데, 이미 GDP 대비 100%인 부채는 물가가 내려갈수록 실질 가치가 오히려 커진다.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낙관(디플레이형)이 맞아도 부채 문제에는 또 다른 부담이 생기는 역설이다.

빚 100조 원이 있을 때 물가가 2배로 오르면 실질 가치는 절반(50조 원)으로 줄어들지만, 반대로 물가가 절반으로 떨어지면 실질 가치는 2배(200조 원)로 불어난다는 게 강사가 든 예시다. 인플레이형이든 디플레이형이든 결국 재정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 AI 성공 후 두 갈래

경로	메커니즘	결과
인플레이형	전력·구리·데이터센터 실물 집약 투자	물가·금리 상승
디플레이형	생산성 급등으로 물가 하락	부채 실질 가치 상승

9. 네 가지 미래, 단기채는 4전 4승

AI 실패, 성공-인플레이형, 성공-디플레이형, 그리고 성장·물가안정·재정전이가 모두 맞아떨어지는 가장 좁은 골디락스 회랑. 앞의 세 시나리오에서는 부채 증가 속도가 성장 속도보다 빨라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장기채는 약세를 보이지만 단기채는 영향이 크지 않다.

장기채가 이기는 유일한 경우는 가장 좁은 회랑뿐 — '가설 위의 가설'이라 부를 만큼 확률이 낮다. 결국 네 시나리오 모두에서 단기채는 손해가 없고, 장기채가 이기는 경우는 딱 하나뿐이다. 지금 물가가 다시 4.2%로 재상승하는 조짐도 있어, 그 좁은 회랑조차 아직 열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강사의 판단이다. 그래서 이 국면에서는 단기채 위주로 대응하는 편이 확률적으로 훨씬 유리하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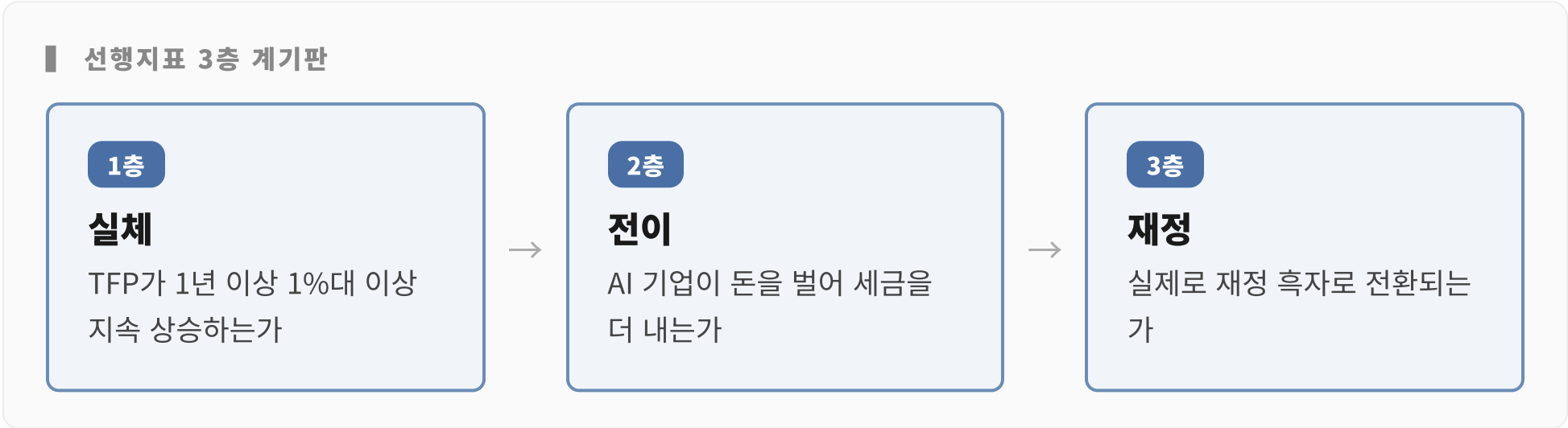
■ 네 시나리오별 승자

시나리오	장기채	단기채
AI 실패	약세	승
성공-인플레이형	약세	승
성공-디플레이형	약세	승
골디락스 회랑(가장 좁음)	승	승

10. 선행지표 3층 + "대비는 유지합니다"

두 번째 질문 — 어떤 선행지표를 봐야 하나. 강사는 3층으로 답한다. 1층 실체: TFP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1%대 이상 오르는지. 2층 전이: AI 기업이 돈을 벌어 세금을 더 내는 구조가 되는지. 3층 재정: 그 결과가 실제 재정 흑자로 이어지는지. 단일 분기 수치(2026년 1분기 0.3%)로 성급히 판단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덧붙인다.

세 번째 질문 — 그래도 대비는 유지해야 하나. 답은 "네, 당연하죠". 바벨 전략은 AI에 반대하는 베팅이 아니라 어느 쪽이 이기든 살아남는 구조라는 게 결론이다. 그 결과가 언제 가격에 반영될지는 아무도 정할 수 없으므로, 타이밍이 아니라 구조로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함께 강조한다. 인류 역사에서 예상 밖의 기적과 위기가 워낙 자주 일어났다는 것도 대비를 놓지 말아야 할 이유로 덧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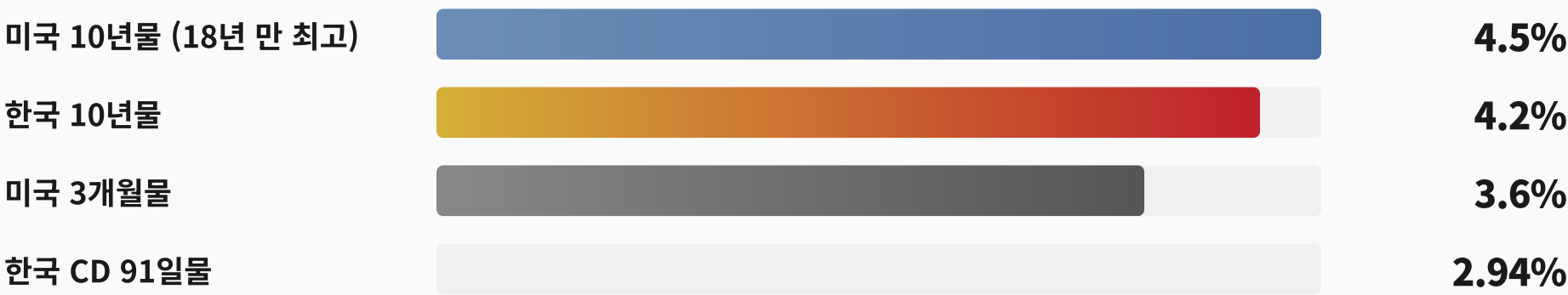
11. 치솟은 건 '긴' 금리다

두 번째 질문자 '공부하는 두더지' 님 — 국채 금리가 올랐는데 지금 채권을 사도 될까요? 답은 용어 정리부터. 짧은 자리(한국 CD 91일물 2.94%, 미국 3개월물 3.6%)는 조용한 동네다.

실제로 치솟은 건 긴 자리(한국 10년물 4.2%, 미국 10년물 4.5%, 18년 만의 최고 수준)다. 짧은 금리는 중앙은행이 결정하고(연준 5.5%→3.75%를 그대로 따라감), 긴 금리는 시장이 결정한다 — 한국은행도 10년물은 이미 통제 밖이다.

가격 변동 위험도 만기별로 다르다. 금리가 0.5%p 오를 때 가격 하락폭은 3개월물 -0.1%, 1년물 -0.5%, 10년물 -4.0%다. 두더지 님이 걱정한 상품(3개월·1년 단기)은 금리가 올라도 사실상 무관하다고 봐도 될 정도라는 게 강사의 진단이다.

■ 짧은 금리 vs 긴 금리



치솟은 건 긴 자리, 짧은 자리는 조용

12. 이사자금은 원화로, 장기자금은 달러로

두더지 님의 돈은 몇 달 뒤 쓸 이사자금. 강사는 이런 돈을 달러로 바꾸는 걸 권하지 않는다. 환전은 살 때·팔 때 왕복 비용이 들고, 3개월 뒤 환율은 아무도 모르며 몇 % 변동은 흔하다. 금리차 0.4%p를 더 벌자고 예측 불가능한 환율에 이사자금을 태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2~3년 이상 굴릴 돈이거나 미국 주식 매수 대기자금이라면 여전히 달러가 정답이다 — 미국 증시 조정 시 환율도 함께 튜는 경향이 있어, 미리 환전해 두면 유리한 시점에 매수할 수 있다. 요컨대 이걸 '이사자금'이 아니라 '장기 자금'의 이야기라는 게 강사가 긋는 경계선이다. 자금의 성격(언제 쓸 돈인가)이 통화 선택보다 먼저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요약되며, 이 기준은 학비·전세금처럼 쓸 시점이 정해진 다른 자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자금 성격별 통화 선택

자금 성격	권장 통화
몇 달 뒤 쓸 돈 (이사자금 등)	원화 유지
2~3년 이상 장기 자금	달러 국채 가능
미국 주식 매수 대기자금	달러 국채 가능

13. 파킹형 ETF vs 정기예금 — 승부는 유동성

파킹형 ETF(CD금리형·KOFR형·머니마켓형)는 하루치 이자가 매일 가격에 쌓여 가격이 잘 안 빠진다. CD 91일물 2.94% ≈ 정기예금 평균 2.92% — 사실상 동률이다. 매매수수료·이자소득세 (15.4%, 동일)를 반영해도 3,000만 원 3개월 기준 세후 파킹형 ETF 약 18.6만 원, 정기예금 약 18.5만 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

진짜 승부는 금리가 아니라 유동성이다. 정기예금은 중도 해지 시 약정이자 대부분을 포기하지만, 파킹형 ETF는 아무 때나 매도해도 그날까지 이자를 그대로 챙긴다. 기초자산이 국채·통안증권이면 예금자 보호 없이도 충분히 안전하다는 게 강사의 견해.

■ 3천만 원 · 3개월 세후 수익 비교

파킹형 ETF		18.6만 원
정기예금		18.5만 원

금리는 동률, 승부는 중도해지 시 유동성

이자는 계약서에, 생산성은 논문에

AI 혁명은 진짜지만, 미국 부채 문제를 풀어주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가장 후한 가정을 넣어도 이자 시계는 계속 돌아간다.

그래서 강사의 답은 예측이 아니라 구조다 — 바벨 전략을 유지하며, 어느 쪽이 이기든 살아남을 준비를 하는 것.

이자는 계약서에 확정·자동·복리로 적혀 있고, 생산성은 아직 논문 수준의 가설·조건부다.

2강

3,000배의 법칙

1997년, 한 사람이 편지 한 통을 썼다. 그 회사 주가는 30년 후 3,000배 — 1,000만 원이 300억 원이 됐다.

† 1 미국 TFP 공식 통계 — BLS, 2024년 1.5% → 2025년 0.8%. † 2 로버트 고든 IT 혁명 생산성 연구 — 1970년 이후 TFP 성장 1920~1970년의 약 3분의 1. † 3 CBO 2026~2036 예산 전망 — 순이자 지출 2026년 \$1.0조 → 2036년 \$2.1조. † 4 2026-02-20 관세 위헌 판결 — CNBC/Penn Wharton, 추정 환급 \$175B. 본 자료는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강사 본인이 명시한 권고(바벨 대비 유지·이사자금 원화 유지·장기자금 달러 가능)만 인용했으며, 질문자 개인 상황에 대한 답변을 일반 명령으로 확장하지 않았습니다.